

2. 99년 예산편성 방향의 의미와 과제

- (내용) 정부는 세수 부족과 구조조정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로 24조 원의 재정 적자를 포함한 총 86조 원 규모의 99년 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
- (특징)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왔던 성역예산(국방비, 농어촌 개발 투자, 교육부문) 배정을 폐지하고, 재정지출의 효율 제고를 도모하기로 함
- (평가) 정부의 99년 경기전망의 대략과 재정규모 및 향후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데 의의가 있음. 하지만 4~5%의 경상GDP성장이라는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근거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이 어려울 경우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, 재정적자 확대로 향후 재정 운영상의 신축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

□ 주요 내용

- (개요) 기획예산위원회는 11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를 고려하여, 올해 예산에 비해 7~8% 증가한 86조 원 규모의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발표
- (세입 규모) 歲入은 稅收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한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해 올해와 비슷한 72조 원 수준으로 예상
 - 올해에 비해 稅收入은 4천억 원 정도 감소한 62조 원,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수입은 2,000억 원정도 감소한 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- 단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주식매각대금이 올해 보다 2조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3조 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
- (세출규모) 올해 세출규모(80.1조 원)에 금융조정 비용(4.4조 원)과 국채발행이자(1.7조 원) 6.1조 원을 추가 계상한 86조 원 내외로 책정함
- (통합재정수지) 따라서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그리고 정부관리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4조 원 내외로 책정 (GDP대비 5~6% 수준)
 - 이는 GDP대비 4%(17조 5천억 원)로 책정된 올해 적자폭에 비해 1~2%p 증가한 것임
- (향후 예산편성 일정) 이번 예산편성 방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정부예산안을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

< '97~'99 주요 재정지표 >

(단위: 조 원)

	'97	'98* (A)	'99(B)	증감(B-A)
○ 재정규모 (전년대비,%)	71.4 (13.4)	80.1 (12.2)	86내외 (7~8)	6내외 -
- 일반회계	67.6	74.9	81내외	6내외
▪ 조세수입	64.0	62.4	62내외	-
▪ 세외수입	3.6	4.6	5내외	-
▪ 국채발행	-	7.9	14내외	6내외
- 재 특(순)	3.8	5.2	5내외	-
○ 경상성장률(%)	8.0	3수준	4~5내외	-
▪ 불변(%)	5.5	△ 4수준	2~3내외	-
○ 통합재정수지	0.1	△ 17.5	△ 24내외	△ 6~7
▪ 대GDP(%)	0.02	△ 4.0	△ 5~-6	△ 1~2

* 제2차 추경예산(안) 기준임
 자료: 기획예산위원회, 『99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』 1998. 8

□ 특징

- ▷예산 편성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왔던 소위 성역예산(국방비, 농어촌 개발투자, 교육부문) 배정을 폐지하고 ▷재정지출의 효율 제고를 도모함

① 성역예산배정의 폐지

- 국방비는 올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거나 동결
-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거나 축소할 방침
- 농어촌 지원 및 교육부문 투자의 경우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실소요를 산정해 지원키로 함
 - 단 유통구조개선사업비는 대폭 증액할 방침

② 재정지출의 효율 제고

- 지역의 균형발전 부문을 새로이 신설하여 SOC투자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어서 SOC투자는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 (98년의 경우 11.4조 원)
 - 그런데 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談合 入札 등 집행상의 낭비 제거 및 완공위주의 재원배분, 외부자원활용(outsourcing)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

□ 평가

- **(정부의 경기전망)** 정부는 99년도 경상GDP가 4~5% 증가할 것으로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. 그러나 이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치임
 - 정부는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이 2%정도로 억제되며, 실질GDP성장률은 2~3%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- 그러나 이는 낙관적인 전망치임. KDI의 경우 실질GDP성장률을 1.8%로 보고 있으며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는 이보다 더 비관적임
 - 실질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아질 경우 조세수입의 감소에 따라 재정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
- **(국채 발행시 물가상승 우려)** 14조 원 규모의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시장내 소화가 의문시되는 만큼 한은의 직간접 인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. 이러한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
 - 그러나 최근 화폐유통속도가 하락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또 국공채를 민간에게 매각할 때 金利가 상승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다면(驅逐效果)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. 따라서 차라리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감수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음
 - 한편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, 물가 불안 여지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**(재정적자 확대 가능성)** 올해에 이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 - 14조 원의 국채 이자만 해도 연 1조 6,800억 원에 달해, 원금 상환과 더불어 향후 재정운영상의 신축성을 크게 저해시킬 전망이다
 - 따라서 경기악화에 따른 재정적자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인력의 봉급 동결 및 감축과 같은 소극적 대응이 아닌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등 보다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개혁이 필요함
 - 또한 국채 상환계획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·공표하여 재정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함

(박 용 주 yjpark@hri.co.kr ☎724-4033)